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인권위원회 규정

제정 2019.7.22. 규정 제79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28조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체육·스포츠분야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스포츠인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 당사자 일방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인권침해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본교 재학생인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란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인권을 상당한 정도로 해한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나.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상당한 방법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위 제1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

5. “피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제4조 (스포츠인권위원회)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독립성) ① 위원회는 한국체육대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제도의 조사와 연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침해 및 성차별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3. 인권침해 및 성차별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건의
4.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 성(性)의 위원수가 적어도 30%는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2명을 둔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인권문제나 체육·스포츠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되, 다음 제2호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단체나 조직에서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이유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한 날부터 새로 시작된다.

제10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위원은 청렴하여야 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청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인권 침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2. 당사자와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

②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및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당해 사건의 직무에서 배제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거나 인지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면으로 의결할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4조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본교 모든 부서 및 교직원은 제1항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직권 조사)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신고 이전에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지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신고,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과 고충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7조 (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고가 신고사유 발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한 이유가 없을 경우 각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인권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기각한다.

제18조 (합의의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원만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제19조 (고발 및 징계 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사건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침해 가해자 등 책임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 (의견 진술의 기회) ① 위원회는 합의의 중재, 고발 및 징계 권고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피해자 등 보호) 위원회는 인권 침해 조사 및 권고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조사결과서 제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활동 내용과 인권 침해 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장의 의무 등) ① 총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결과서 내용이나 의견 표명, 권고 사항 등 업무수행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교 모든 구성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당 등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이나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제798호, 2019. 7.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